

월요광장

반값 등록금 재정부담, 누구 봇인가



김병식

초당대 총장

18대 대선을 통하여 이슈화된 '반값 등록금'의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과 동결 내지 인상을 원하는 대학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기대로, 학생들은 이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릴 현실적 방도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정부도 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올해 대학생에 대한 국가예산 예산을 5250억 원 늘려 2조7750억 원(총 반값 예산으로 추정되는 7조원의 29%에 해당)을 확보하되, 학부모들의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장학금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립 대 등록금을 기준으로 삼고, 성적이 일정기준(B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반값등록금의 문제를 국가장학금의 형식으로 해결하겠다 한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등록금의 문제는 장학금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장학금은 학생을 지원하는 개인 차원의 문제이고, 등록금은 대학 운영의 재정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문제를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국가예산은 사립대학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반값 등록금의 문제는 '반값'이라는 용어가 주는 느낌에서도 알 수 있어. 선거를 앞두고 드표가 주요 목표였던 정치권이 비교적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했던 정치적인 사안이다. 중간층을 과도한 대학등록금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줌으로써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が 간단히 않은 사회적 담론이 요구되는 함축적 의미를

자닌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즉, 지금 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고등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향후 누가 어떻게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특히 우리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에 관한 제도적 문제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도 중요 잠정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립 대와 사립대는 그 역할과 특성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같은 납세자의 입장인 사립대학부모는 국립대에 비하여 월천 많아, 두 배에 가까운 등록금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육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리고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직접적 지원여부를 핵심으로 한, 그리고 기업과 사회의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하다. 특히 사립학교법의 정비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 재정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다.

지식중심사회인 미래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몇 개의 부설 대학을 빌미삼아 더 이상 지체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도로서 우리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다.

등록금의 조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에 직접 의존하는 등록금, 민간과 졸업생의 기부금, 그리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그것이다. 우리는 국가 초창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수요를 일으키지 않는, 그래서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한 대학의 발전은 한계에 이르렀다.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의 운영으로는 이미 선진화된 우리나라에 걸맞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리고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직접적 지원여부를 핵심으로 한, 그리고 기업과 사회의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하다. 특히 사립학교법의 정비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 재정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다.

지식중심사회인 미래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몇 개의 부설 대학을 빌미삼아 더 이상 지체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법조칼럼

법관평가제에 대한 단상



강성두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지역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서울, 부산 등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앞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에 대한 불신자인 공무원의 업무수행은 공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여기에 법관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참여 회원 수가 많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법관

평가한다는 제도 자체를 처음 실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법관평가는 예년에 비하여 질적, 양적으로 많이 충실했습니다. 우선 참여 회원 수가 대폭 증가했고 평가대상 법관과 전체 평가 현황도 큰 폭으로 증가해 출발 초기부터 있던 객관성 탐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 대상 법관들의 평정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소송 관계인에게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해 예단을 내비치는 경우, 한쪽 소송 관계인에게 유리한 듯 한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증인신청을 배척하거나 재판 진행시간을 지키지 않아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하면서 재판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재판을 통하여 이를 판단하거나 진행하는 해당 법관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

제는 제도 자체를 정비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도 재판 및 사법행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광주지역 시민을 대표하는 17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시민사법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원의 재판을 노미너팅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가는 등 공정하면서도 일반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법관평가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취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정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관평가를 누가 누구를 평가하느냐의 주체와 객체의 문제만으로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회 역시 시

작된 법관평가가 내실 있게 운용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노력이나 변호사회 등 외부 단체의 협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 체입니다. 절대 '권위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재판의 본질상 '권위'까지 추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는 사법부를 비롯한 저와 같은 변호사를 등 범죄에서 우선 노력해야 할 일이지만 국민의 협조나 배려 없이는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이 소송을 하거나 당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특성상 양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불만을 갖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 우선 생각하는 성숙한 의식이 더 요구됩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글을 쓰면서 필자도 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제도의 취지와 같이 변호사인 제 스스로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명예와 품위를 보전해야 하는 변호사의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다짐해 봅니다.

기고

국립공원 무등산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남기

광주시도시공사 기획재정관

요산유수(樂山樂水)란 말이 있다. 논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산수경치를 좋아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또한 어진 자는 의리에 밝고 산과 같이 중후하여 변하지 않으므로 산을 좋아하며, 지혜로운 자는 사리에 통달하여 물과 같이 막힘이 없음으로 물을 좋아한다고 해석된다.

무등산이 도립공원이 된 지 40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국내 21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경사를 맞았다. 지명에 대한 유래는 분분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도심

가까운 곳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수백 년 세월을 세찬 비바람, 번개, 천둥에도 끄떡없이 꽂꽂이 서 있는 무등산의 품격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시, 서, 화, 등산, 음악 등 각각 좋아하는 분야를 통해 무등산을 수없이 노래하고, 자랑스러워 해왔다. 필자는 30여 년간 시시화 작품활동을 해오면서 상무골의 15층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등산을 바라보며 근무하고 있는 덕택으로 무등산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무등산을 소재로 한 시화도 제작했는데 그중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문인이면서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던 고태필(高台弼)은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은 우리나라에서 수려한 산일세/ 옛적엔 이곳에 막으로 왔었는데, 오늘은 다스리려 오게 되

었네/ 차가운 밤에 벌레소리 따뜻하고, 구름 걷히 하늘엔 달빛이 밝아/ 나그네가 수십 겨우 떠나지 않을 수 없다.

김규동(金奎東) 시인은 무등산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 몸이 되기도 전에/ 두 팔 벌려 어깨를 쟀다/ 흘러졌는가 하면/ 다시 모이고/ 모였다가 다시 흘러진다/ 높지도 알지도 않게/ 그러나 모두는 평등하게/ 이 하늘 아래 뿐리 밖고 서서/ 아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처럼 오랜 세월을 견디었구나"라고.

아름다운 국립공원, 명품 국립공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행정 기관이나 시민들이 승격이라는 만족에 만족해 있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할 일을 찾아나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광주시가 정상 군부대 이전이나 방송·통신시설 통합, 사유지 매입문제,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잘 보전된 무등의 자연환경을 후손대대로 물려줄 것을冀(冀)하고자 한다.

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라 한다. 이 제도는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로 줄려나가 택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차치 가진 자에게 유리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제도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을 위해 구속을 납부하지 않도록 보석 조건부 영장제도를 많이 활용하되, 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다.

즉 공무원이 공무상 횡령이나, 뇌물수수,

광주문화재단에서도 무등산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으로 유치원생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평생인 무등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절로 들도록 쉽게 접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전국에서 무등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더욱 늘었다.

광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다. 시민들이 무등산을 찾는 '고객'들에게 친절, 청결, 질서로 대하여 인권과 평화,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창조도시 광주를 살감할 것이다. 명품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수다.

특히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잘 보전된 무등의 자연환경을 후손대대로 물려줄 것을冀(冀)하고자 한다.

구두 뒷축의 높낮이로 내편 네편을 구분한 후 자기 사람만을 쓰는 왕을 안

社說

4대강 부실, 진상·책임 규명이 우선이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

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총 22조 원의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대역사의 실상이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부실부상이었다니 어찌나가 없다. 설계,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부실의 속살을 드러냈으며 진상 재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4대강 사업은 이제 종합진찰을 통해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 정부는 관련 책임자에 대해선 정치적·법적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부실을 방관한 감사원도 예외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전 4대

강 사업에 대해 보완할 것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바로 잡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국민 70% 이상의 반대 속에 무려 22조 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이 이 정도로 부실하다면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조류 농도도 1.9% 증가했다.

사업비 낭비도 심각하다고 한다.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4대강 전 구간에서 대규모 준설을 벌였으나 준설량의 20% 이상이 재퇴적돼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제 종합진찰을 통해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11개 보는 잘못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형 보 대신 소형 보가 설치되었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환경부의 '손톱 밀 가시'를 수집한 결과 17일 현재 광주·전남 8건, 전국 222 건이 접수됐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에

기업도 있었다.

하청업체들이 하소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다. 대형마트들이 할인행사를 하면서 부당한 협력업체에 떠넘기거나, 대기업이 납품을 빌미로 하청업체들의 기술과 인력을 빼기는 악순환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손톱 밀 가시'를 수집한 결과 17일 현재 광주·전남 8건, 전국 222 건이 접수됐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에

기업도 있었다.

중소기업인들은 실제 출자총액 제한 제도와 같은 경제 구조보다 납품단가, 신용카드 수수료 등 기업을 하면서 자주 겪는 문제들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았다.

이번에 수집된 사례들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장의 청년인력 부족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고집해 문제로 지적했다. 규정에 묶여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無等鼓

타까워 하며 '당파'(黨派)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오버랩되기도 했다. 고전문학이 시대를 초월해 끊임없이 읽히는 이유인 듯 싶다.

나이 들어 접한 '왕역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많았다. 그 중에서도 풍자 문학의 고전으로 흡취하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1726년 출간)는 흥미로웠다.

어린이가 알고 있던 '소인국과 대인국'으로 떠난 걸리버의 유쾌한 모험은 절대로 좋았던 문학을 말한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를 통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갖기보다는 흥미로웠다.

어린이가 알고 있던 '소인국과 대인국'으로 떠난 걸리버의 유쾌한 모험은 절대로 좋았던 문학을 말한다. 조